

## 한중 농업·농촌 인재정책 비교와 시사점

\*

### 1. 서론

- 과거 농업생산은 토지와 노동 투입의 양적 확대를 통한 생산 증대를 구하였음. 그러나 최근 농업의 성과는 농업기계화, 품종개량, 디지털농업과 같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양적 투입 확대보다 기술 및 인적자본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이것은 농업의 핵심 생산요소가 단순 노동력 확보에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 축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 또한 농촌은 농업생산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산업과 생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어,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해짐. 이런 점에서 농업·농촌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은 농업의 경쟁력 확보, 삶터·일터·쉼터로써의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임.
- 한국과 중국은 공통적으로 농업인구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청년 인구의 도시 유출로 인해 농업 종사자의 연령이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농업 부문의 세대교체를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양국 모두에서 농촌과 도시의 소득, 의료, 교육, 생활서비스 등의 격차로 인해 청년층의 농촌 유입과 정착이 어려우며, 농촌지역의 경제·사회 활동을 이끌어 나갈 인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농업의 생산기반 약화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침. 그러므로 양국에서는 농업·농촌 인력 및 인재 부족 문제를 단순한 산업적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 지역공동체 유지,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는 국가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동북아세션 중국농업동향의 농정 이슈, 가격 동향, 무역 동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에서 작성하였음.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업무보고의 5대 중점과제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구현”을 포함하고, 구체적으로 예비농업인 대상 맞춤형 연락 강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 비축농지의 청년농 우선 임대, 청년농의 전문농 성장을 돕는 팀 프로젝트 구성, 온라인플랫폼 연계 등 청년농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실시, 청년 비즈니스 산업 등 농촌 재구조화, 빈집 정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의 노력을 할 것으로 발표함(농림축산식품부 2025).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 발표한 중앙1호 문건에서는 “도시와 농촌 요소의 양방향 이동 촉진”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도시로 이주한 농촌 주민의 정착과 농촌 인재 양성을 주요 세부 과제로 제시함. 이 중 농촌 인재 양성 정책으로 농촌 서비스 및 농촌지역 창업·취업 장려, 대학졸업생의 삼지일부 실시, 농촌 여성 창업 지원, 대학생 서부 자원봉사, 농촌진흥청 청년 공헌 행동 등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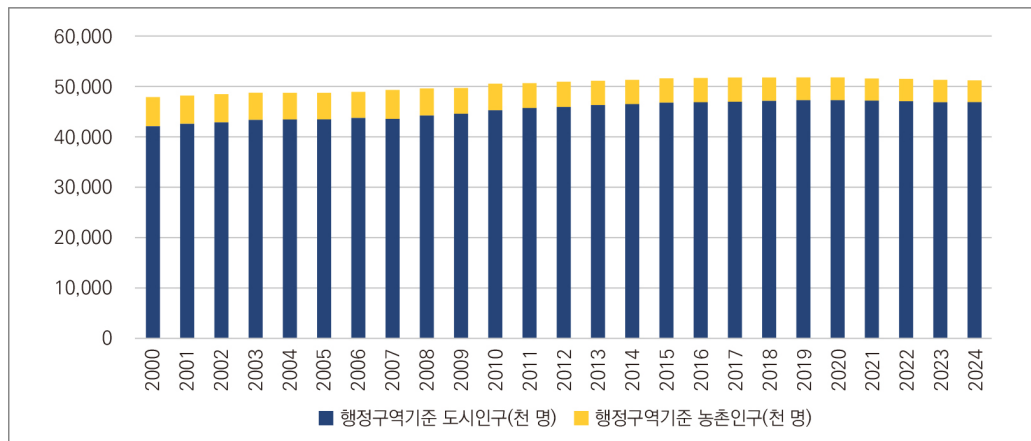
## 2. 한중 농촌인구 및 농업인구 구조 변화

- 한국과 중국은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촌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도시 유출을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농업인구 고령화 및 청년농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농촌지역의 다양한 산업, 공공서비스, 지역공동체를 이끌어갈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중국보다 도시화 및 산업화가 먼저 진행되면서 농촌인구 감소가 고착화되면서, 고령화 및 후계인력의 구조적 부족이 핵심 문제로 부각됨. 중국은 여전히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년층 유출 및 농촌인구 감소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귀향인재 및 향촌인재 확보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음.
- 한국의 행정구역기준 농촌인구는 2000년 590만 9천 명에서 2024년 439만 명으로 감소

하였음. 행정구역기준 농촌인구 비율은 2000년 12.3%에서 2024년 8.6%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 이후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단계임을 보여줌. 중국의 농촌 상주인구는 2000년 8억 명 수준에서 2025년 4억 5천 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도시화율이 2000년 36%에서 2025년 68%로 급증하여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 중임을 보여줌(그림 1,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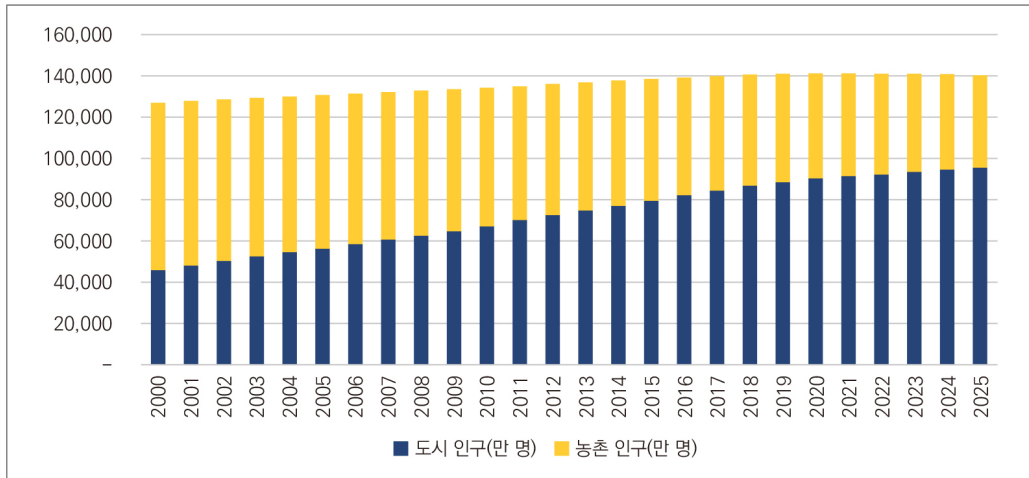
- 한국 농업인구의 경우 고령화가 심화된 단계에 진입한 반면, 중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단계임. 한국의 경우 2024년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55.8%로 높은 수준이지만, 중국의 경우 2016년 말 기준 농가 생산경영 인구 중 5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3.6%로 조사됨. 2016년 기준 한국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40.3%였던 것을 고려하면 중국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고령화 속도를 볼 때 향후 중국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표 1, 표 2 참조).
- 농업인구 고령화와 함께 청년농 감소 또한 양국의 농업 인력구조 변화의 특징임. 한국의 경우 1970년 87만호던 청년농이 2020년 12,426호로 약 98.6%가 감소하여, 같은 기간 전체 농가 수가 약 58.3%가 감소한 것에 비해 청년농 비율이 급감하였으며, 이로 인한 세대 단절이 심해짐(박미선 2026). 중국의 경우 1996년 35세 이하 농가경영인구 비율이 62.5%였으나 2016년 19.2%로 역시 급감하였음(표 1 참조).

〈그림 1〉 연도별 한국 농촌인구 변화



자료: e-나라지표. “도시지역 인구현황”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연도별 중국 농촌인구 변화



자료: 国家统计局, “总人口”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1〉 연령별 중국 농가경영인구

단위: 만 명, %

| 구분      | 1996   | 2006   | 2016   |
|---------|--------|--------|--------|
| 35세 이하  | 36,838 | 11,078 | 6,023  |
| (비율)    | 62.5%  | 32.3%  | 19.2%  |
| 36세~54세 | 16,029 | 15,678 | 14,848 |
| (비율)    | 27.2%  | 45.8%  | 47.3%  |
| 55세 이상  | 6,086  | 7,490  | 10,551 |
| (비율)    | 10.3%  | 21.9%  | 33.6%  |
| 합계      | 58,953 | 34,246 | 31,422 |

주: 연령 분류는 2016년도 자료의 분류를 따랐으며, 1996년도 자료의 경우 36세~55세 인구와 56세 이상 농업 인구수를 표기함. 2006년도 자료에서는 31세~40세 및 51세~60세 농업 인구 수의 1/2이 35세 이하 그룹과 55세 이상 그룹에 속하는 것을 가정하여 수치를 보정함.

자료: 国家统计局, “第一次农业普查”, “第二次农业普查”, “第三次农业普查”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2〉 65세 이상 한국 농가인구 비중

단위: 천 명, %

| 구분        | 1998  | 2006  | 2016  | 2024  |
|-----------|-------|-------|-------|-------|
| 농가인구      | 4,400 | 3,304 | 2,496 | 2,004 |
| 65세 이상 비중 | 19.6% | 30.8% | 40.3% | 55.8% |

자료: e-나라지표. “농가 및 농가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3. 농업·농촌 인재 부족의 구조적 원인

- 한국과 중국의 농촌인구 감소와 농업인구 고령화라는 공통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것은 농촌지역 전반의 인재 부족으로 이어짐. 이러한 농촌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적 요인, 농업 노동환경, 생활환경,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농업·농촌 인재 유입과 정착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1) 도농 간 경제 활동 및 취업기회의 차이, 농업과 비농업 부문 소득 격차, 농업 초기 투자 부담 등 경제적 요인, (2) 농번기 집중노동, 주말 및 휴일이 구분되지 않는 근무형태, 자연재해에 따른 경영위험 등 농업 노동환경, (3) 문화·여가시설, 일자리, 교육 및 돌봄 서비스 등의 부족 등 생활환경 요인을 들 수 있음.
  - 선행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 관계인구 중 고관여 청년은 경제적 수입(80.0%)과 미래 경제활동 기회(79.0%)를 중요시하며 활동 지속 의향(93%)의 가장 큰 이유로 '농촌에서 찾은 경제적 기회(61.3%)'를 선택하여(권인혜·이진 2025) 청년층의 농촌 정착에 경제적 이유가 주요함을 시사함. <표 3>과 <표 4>를 보면 도시지역과 비교해 농촌지역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이 높으며, 농촌지역에서 비농림어업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알 수 있음.

〈표 3〉 2025년 하반기 기초지자체(시·구, 군)별 1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취업자 비율 평균

| 업종               | 시·구 지역 1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취업자 비율 평균 | 군 지역 1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취업자 비율 평균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3.2%                             | 21.8%                          |
| 광·제조업            | 9.2%                             | 6.0%                           |
| 건설업              | 4.1%                             | 3.7%                           |
| 도소매·숙박음식업        | 11.6%                            | 8.9%                           |
| 전기·운수·통신·금융      | 7.5%                             | 3.9%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 25.2%                            | 22.9%                          |

주: 도농 지역간 업종별 고용인구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읍·면과 동을 비교할 필요가 있으나,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하는 「지역별고용조사」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므로, 여기서는 시·구를 도시지역, 군을 농촌지역으로 가정하여 통계를 분석함. 2025년 기초지자체별 1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대비 2025년 하반기 업종별 취업자 수의 비율 평균을 산정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2025년 하반기 시군구 산업별 취업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별(읍면동별) 5세별 주민등록인구”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4〉 2025년 하반기 시·구 및 군의 1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비농림어업 취업자 비율

| 구분                  | 시·구 지역     | 군 지역      |
|---------------------|------------|-----------|
| 1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명, A) | 41,681,330 | 3,837,094 |
| 비농림어업 취업자수(명, B)    | 2,464,8000 | 1,827,000 |
| B/A(%)              | 59.1%      | 47.6%     |

주: 도농 지역간 업종별 고용인구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읍·면과 동을 비교할 필요가 있으나,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하는 「지역별고용조사」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므로, 여기서는 시·구를 도시지역, 군을 농촌지역으로 가정하여 통계를 분석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2025년 하반기 시군구 산업별 취업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별(읍면동별) 5세별 주민등록인구”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한편, 농업 분야에도 청년농의 신규 진입을 제약하는 경제적 요인이 존재함. 통계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2000년 2,307만 원에서 2024년 5,06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업소득은 1,090만 원(농업소득률 56%)에서 958만 원(농업소득률 26%)으로 감소하여(e-나라지표, “농가 소득현황”) 농업 자체 수익성이 청년농의 신규 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함. 또한, 농지가격 상승, 청년농이 선호하는 지역의 높은 농지 구입비용, 증여 및 상속 공제의 제한, 기존 농업인 중심의 농지 거래 등으로 신규 청년농의 농지 확보가 어려운 점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임소영 외 2021). 토지 확보 이외에도 스마트팜과 같이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경우도 청년농의 진입은 제약될 수 있음. 2023년 기사에서 스마트팜의 초기 투자 비용이 일반 비닐온실의 2배로 대부분 농업인이 대출을 하여서 투자하는 점이 지적된 것과 같이(한겨레 2023),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농업 분야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이 신규 청년농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농업 노동환경 측면에서도 청년농의 신규 진입과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이 존재함. 농업취업자는 일반취업자보다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실내·실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 ‘수공구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 환경에 더 노출되어 있으며, 주당 6일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농업취업자(58.2%)가 일반취업자(26.5%)보다 높음, 또한 농업취업자의 밤 근무나 초과근무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비율은 높으며, 일반취업자보다 짧게 반복되는 작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22).

- 도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의 생활환경 및 정주 여건도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을 막는 요인임. 5년마다 시행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에서 전국 농어촌 및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농촌진흥청 2024),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이 농업·농촌 인재 유입과 장기 정착을 위한 중요 과제임을 시사함.
- 중국의 경우에도 농업·농촌 인재 유입과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1) 농업과 비농업 부문의 소득 격차, 낮은 농업 노동 생산성 등 경제적 요인, (2) 육체노동 중심의 근무 환경과 외부 작업환경 등 농업 노동환경, (3) 문화·여가시설, 인터넷 인프라,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부족 등 생활환경 요인, (4) 농업인 관련 낮은 직업 평판을 들 수 있음(曾俊霞 2026).
  - 2024년 기준 중국 도시 거주자 1인당 가처분소득은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2.3배로 도농 간 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남. 또한 2019년 중국의 1인당 경작지 면적은 일본의 1/3, 미국의 1/118, 호주의 1/150 수준으로 영세한 농업구조를 보임. 이러한 영세한 경작 규모는 노동생산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농업 부가가치가 1만 9,734 달러인 것과 비교해 중국의 1인당 농업 부가가치는 6,800달러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농업 노동의 특성상, 체력 소모량이 도시 사무직 근로자의 1.5~2배 수준이며, 대부분 실외의 고온, 저온, 습한 환경에서 일하며, 농사철에는 하루 평균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이 요구됨. 2021년 기준 중국 농업 경작 및 수확 종합기계화율은 72%인데, 이 중 축산업 기계화율은 39%, 농산물 1차 가공 기계화율은 42%, 구릉 산간 지역 기계화는 50%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여, 강한 노동강도가 필요함을 시사함.
  - 생활환경 면에서, 2025년 인터넷 보급률은 도시 85.1%, 농촌 69.5%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의 택배, 영화관, 카페, 대형 쇼핑몰 등에 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편임. 또한 2023년 인구 1천 명당 면허를 소지한 (조)의사 수는 도시 4.1명, 농촌 2.7명, 전국 노동 인구의 평균 교육 연한이 도시 11.8년, 농촌 9.4년으로 의료 및 교육 수준의 도농 격차가 뚜렷함.

- 2005년 연구에서, 전국 직업 평판 조사에서 농업인은 81개 직업 중 72위, 51개 직업 중 50위로 사회적 평가가 낮게 나타나, 농업인의 낮은 직업 평판이 청년층의 농업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함.

#### 4. 양국 농업·농촌 인재정책 비교

- 한국의 농업·농촌 인재정책은 농업 분야 후계인력 육성과 농촌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농촌 인재정책으로 나눌 수 있음. 농업 분야에서는 고령화 및 청년층 유입 부족에 따른 세대 단절을 주요한 과제로 보고,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 왔으며(박미선 2026), 농촌 인재정책 면에서는 귀농·귀촌 지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 옴.
  - 후계농 및 청년농 육성과 관련하여, 1981년부터 현재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2004년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2012년 전문농어업인 육성방안, 2018년 청년창업농육성대책이 마련되었음. 2023년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은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으로, 초기 생활비 부담, 농지 및 자금 확보, 맞춤형 교육, 주거 및 보육 수요에 대응한 종합 지원체계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발표됨.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준비-진입-정착-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그리고 청년농 육성을 위해서 영농정착지원금과 같은 소득 지원사업, 후계농 육성자금 및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과 같은 자금 지원사업, 선임대 후매도 등 맞춤형 농지은행 지원, 농업계 학교 지원이나 스마트팜 보육센터 운영과 같은 교육·컨설팅,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을 통한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 중임(박미선 2026).
  - 정부는 농촌 인재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5년 발표된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에서는 농어촌 사업체 수 연평균 5% 증가, 농어촌 지역 생활인구 연평균 3% 증가, 도농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주거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음(관계부처 합동 2025). 이와 함께 농촌 인재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예를 들어,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서는 귀농·귀촌 사전 지원 강화, 귀촌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귀농인의 영농정착 지원, 농촌공간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 통합 플랫폼 구축이 추진하고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22). 또한 2023년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수 있으며, 농촌협약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 투자사업의 재원 분담을 협의하는 등 지역 맞춤형 농촌정책을 추진하고 있음(법제처 국가법률정보센터 2026).

- 미래 청년농 육성과 관련하여 박미선(2026)은 장기적 영농 정착률을 높이는 것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하고, 영농정착지원사업 패널조사를 통한 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다른 농업정책과 연계한 핵심 경영기반 지원 강화,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전 탐색 기능 강화 및 예비농업인 지원 체계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자율성 강화 및 맞춤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또한 마상진 외(2023)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년세대 유입 및 정착을 위해서 (도시, 농촌) 청년의 농촌 정착 지원, 농촌 청년 활동가 육성 및 취창업 교육, 농촌 공동체 및 지역개발 활성화, 청년 주도 농촌의 디지털 전환(스마트 농촌 구현), 미래 세대를 위한 농촌 교육, 농촌 청년 정책 추진 체계 확립 등 6개 전략을 통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중국의 경우 다양한 경로로 농촌에 인재를 유입하여 향촌진흥(乡村振兴)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최근 정책이 진행됨(曾俊霞 2026). 후진타오 주석 집권 시기 중앙1호 문건은 농민 소득 증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으나, 2012년 중앙1호 문건에서 ‘신형직업농민(新型职业农民)’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여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국가적 정책과제로 제시함(农民日报 2012). 이후 2018년 중앙1호 문건에서 향촌진흥이 국가 전략으로 제시되고 2021년 중앙1호 문건 제목에 다시 등장하면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2026) 다양한 인재를 유입하여 향촌진흥을 이루려는 국가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됨.

- 중국 농촌 청년 유입은 (1) 2세대 및 3세대 농업인과 같은 농촌 현지인, (2) 도시에서 귀향한 농민, 귀향 대학생, 전역 군인, 해외귀국자 등 자발적 귀향인, (3) 3지1부(대학 졸업생의 농촌 근무를 통해 교육·농업·의료 지원 및 향촌진흥 지원), 대학생 마을 공무원, 선발 공무원, 제1서기 및 파견 간부, 과학기술 특파원, 농촌 CEO 등 정부 정책을 통해 유입된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음(曾俊霞 2026).
- 선도자 프로젝트, 3지1부, 청년의 농촌 진출·취업·창업 장려, 전문 농업인 직급 평가, 10대 우수 농민 선정 및 기술 경영대회, 창업 담보 대출 및 이자 지원과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정책(예, 하이난성 귀향 청년 창업 육성, 절강성 청년 농촌 실습 거점 1,000개 조성, 사천성 창업 상업보험 개발, 절강성의 우수 농업인 보조금 지급, 절강성 개인 창업 담보 대출 제공 등)이 존재함(曾俊霞 2026).
- 曾俊霞(2026)는 중국 농촌 청년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 체계 구축 및 지원, 부처 간 칸막이를 벗어난 교육시스템의 통합,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주도 인력 유치, 단기 교육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젝트 구축, 새롭게 유입되는 인재뿐만 아니라 기존 농촌에 거주하는 인재 대상 사업 강화를 제안.
- 한국은 중국에 비해 후계농·청년농 중심의 농업인재 육성 정책이 먼저 체계화되었으며, 귀농·귀촌과 농촌공간 정책 등을 통해 농촌인재 정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반면 중국은 향촌진흥 전략 아래 농업인력과 더불어 귀향인재, 대학생, 전문기술인력 등 다양한 인재의 농촌 유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5. 시사점

- 한국과 중국의 농업·농촌인력 정책은 모두 청년층 유출 및 농업경영인구 고령화의 공통된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나, 정책 목표와 접근 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함. 한국은 농업생산을 담당할 후계인력 및 청년농 육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귀농·귀촌 지원과 농촌공간 정책 등 농촌 인재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중국은 향촌진흥 국가전략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농촌으로 유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차이

는 양국에 도시화에 관한 진행 단계 차이가 존재하며, 농업구조 및 농촌발전 단계도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보임.

- 한국은 이미 청년농 육성정책과 귀농·귀촌, 농촌공간 정책 등 다양한 농촌 인재정책을 추진 중임. 양국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업·농촌인력 부족은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농업 작업 환경, 생활환경 및 정주 여건, 사회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그러므로 농업·농촌 인재정책은 개별 정책 확대보다 농업 인재정책과 농촌 인재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농업경영 기반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양국 모두 신규 인력 및 인재 유입과 함께 장기 정착률, 경영성과, 지역사회 참여도 등에 관한 성과평가 및 정책 환류가 필요하다고 보임. 박미선(2026)이 제안하였듯이 영농정착지원사업 패널조사를 통한 장기 정착 및 경영성과 분석을 하는 방안은 장기 정착률, 지역경제 기여도, 공동체 참여도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음. 曾俊霞(2026)가 제안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농촌인력 교육체계 구축은 신규 유입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중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전국 단위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임.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별 산업구조 및 인구 특성에 맞는 농업·농촌 인재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요약하자면, 한국은 농업 인재정책과 농촌 인재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중국은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체계적인 단계별 지원체계, 성과평가 및 정책 환류 시스템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단, 양국 모두 인력정책을 넘어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사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농업·농촌 인재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5),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
- 권인혜·이진(2025), 청년 관계인구의 농촌지역 진입 및 정착 확대를 위한 경제활동 지원방안 연구, P2025-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2022),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22), 한눈에 보는 농업취업자와 일반취업자의 근로환경 비교: 제6차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 이용.
- 마상진, 김연중, 김용렬, 최재현, 김문길, 조성은, 조성호, 우선희, 김남훈(2023),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2차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3-77-01(R98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미선(2026), “농업인력 구조 변화와 세대전환 청년농 육성정책 현황 및 발전 방향”, 제33회 한중농업포럼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소영, 김영준, 하인혜(2021),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P27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2026), “2026년도 중앙1호 문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세계농업 봄호(제26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曾俊霞(2026), “中国农村青年与返乡人才政策的现实与挑战”, 제33회 한중농업포럼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5.12.11.),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5대 중점과제, 3대 개혁·쟁점과제 추진방안 발표”.
-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24.3.29.),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 조선일보(2026.1.27.), “수억 필요하다던 스마트팜, 240만 원으로 해결”.
- 한겨레(2023.1.26.), “‘7년 고생하면 초기 비용 갚아요’ ... 스마트팜에 폭 빠진 청년들”.
- 农民日报(2012.3.22.), “让更多高素质农民成为职业农民”.

### 〈온라인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1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13)), 주민등록인구현황, 검색일: 2026. 6. 30.

- \_\_\_\_\_([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30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30S&conn_path=I3)), 지역별 고용조사, 검색일: 2026. 6. 3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47호), 검색일: 2026. 6. 30.
-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0](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0)), 농가 및 농가인구, 검색일: 2026. 6. 3.
- \_\_\_\_\_([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0](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0)), 도시지역 인구현황, 검색일: 2026. 6. 3.
- \_\_\_\_\_([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49](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49)), 농가 소득현황, 검색일: 2026. 6. 3.
- 国家统计局(<https://www.stats.gov.cn/sj/pcsj/nypc/dycnypc/>), 第一次农业普查, 검색일: 2026. 6. 3.
- 国家统计局(<https://www.stats.gov.cn/sj/pcsj/nypc/nypc2/ny/indexch.htm>), 第二次农业普查, 검색일: 2026. 6. 3.
- 国家统计局(<https://www.stats.gov.cn/sj/pcsj/nypc/202302/U020230223531273769774.pdf>), 第三次农业普查, 검색일: 2026. 6. 3.
- 国家统计局(<https://data.stats.gov.cn/dg/website/page.html#/pc/national/yearData>), 总人口, 검색일: 2026. 6. 3.

